

# ISSUE & FOCUS

Newsletter 2015-9

## 사법시험 존치 주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필우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1. 존치 논쟁 불거진 이유

사법개혁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할 것이 결정된 바 있다. 다만 폐지에 앞서 2015년부터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관해 논의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이슈는 아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일부 젊은 변호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논쟁이 불거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법시험 출신 젊은 변호사들의 기득권침해에 따른 반(反)로스쿨 정서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의 사다리'라는 프레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2012년은 대한민국 법조사에서 기념비적인 해이다. 2012년 한 해 배출 변호사는 2,500여 명에 이른다. 2011년까지 총

변호사가 1만3천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인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변호사들의 취업난으로 이어졌고, 2012년 배출된 변호사의 반 이상이 1년여 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 취업난은 반로스쿨 정서로 이어졌고, 그때부터 로스쿨에 대한 비난은 본격화됐다. 이어 2013년과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회 선거가 있었는데, 사법시험 출신 청년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와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제로 예비시험 공청회를 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희망의 사다리’ 프레임을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와 결부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결국 사법시험 존치의 논쟁은 진정 대한민국의 법조 개혁과 법조 발전, 그리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는 무관하게 법조인 내부와 정치권의 정치적 이익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였고<sup>1)</sup>, 비노진영에서도 가세하여 새누리당과 새정련 비노계와 친노계의 다툼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 2. 사법시험 존치 논쟁에 대한 이해

사법시험 존치 주장자들은 로스쿨제도에 대해 불평등·불공정하고 돈(錢)스쿨, 음서제인 반면 사법시험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이면에는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해관계가 얹혀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로스쿨에 대한 잘못된 오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주요 논거는 로스쿨은 돈스쿨이고, 불평등, 불공정하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것인데,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해 정반대다. 사법시험은 기회가 균등한 시험도 아니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험도 아니다. 그렇지만 로스쿨은 사회적 약자를 제도적으로 배려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돈스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불평등, 불공정, 음서제라는 주장 중 그 어느 하나도 입증된 것이 없다. ‘그렇지도 모른다’는 그야말로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다.

1)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이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연 것과 수원에서 손학규 후보를 이긴 김용남 의원, 관악을 재보궐 선거에 이긴 오신환 의원의 당선 등이 새누리당의 입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① 로스쿨은 돈스쿨?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년 1,520만 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장학금도 평균 644만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평균 성적을 받는다면 1년에 867만 원, 학기당 438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또한 사법시험 준비와는 달리 연 2.4 % 이자로 학자금 및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로스쿨은 석사과정이라는 것이다. 석사학위를 취득한다는 점을 포함할 때, 이 금액이 돈스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 ② 로스쿨은 불공정, 불평등하고 음서제의 통로인가?

로스쿨 입시는 LEET(법학적성시험), 공인영어성적, 학점, 면접의 총점 합산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객관식(7과목), 사례형(8과목), 기록형(공법, 형사법, 민사법)으로 선발한다. 사법시험은 1차 객관식(4과목), 2차 사례형(7과목), 3차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로스쿨에서의 면접은 불공정한 면접이고, 사법시험 면접은 공정한 면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sup>2)</sup>.

최근 한 언론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사법연수원 38~44기) 7년간 배출된 사법시험 합격자 6000여 명 중 법조인의 자녀는 모두 69명에 불과했지만, 로스쿨 1~3기 3년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4500여 명 중 법조인 자녀는 이보다 많은 71명이었으며 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신분 대물림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 2세 법조인은 사법시험 68명(1.13%), 변호사시험 62명(1.37%)으로 차이가 없다. 결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이나 법조인 세습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4. 로스쿨로 인한 법조의 변화

로스쿨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조 문화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의 다양한 직역(職域)으로의 진출이다.

대한민국의 법조는 송무(訟務, 소송에 관한 사무)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따라서 행정부와 입법부에서의 법치주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업 법무와 대외 상공업무, 통상 협상 등에서 약점이 노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로스쿨 제도로 인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우선 국가 행정기관과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6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각 교육청에도 변호사가 채용되었다. 이는 과거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신분이 5급 공무원이었던 관계로 지자체나 개별 국가 기관이 변호사를

2) 로스쿨 면접과 사법시험 면접의 탈락자 수는 매우 상이하다. 또한 그 방법에 있어서도 로스쿨 면접은 총점 합산 방식인 반면 사법시험은 P/F 면접이다.

채용하는 과정에 예산과 직책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현재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을 구별하지 않고 6급으로 선발하고 있어 다수의 기관과 지자체가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관에 ‘법률홈닥터’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채용되어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sup>3)</sup>.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고, 대기업의 경우 일반 사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등, 변호사들의 다양한 직군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과거 송무에 한정되었던 변호사의 업무가 입법·행정·통상 등의 분야로 확대되어 진정한 법치주의 확립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 5. 사법시험 존치 결정시 나타날 우려

그렇다면 사법 시험을 존치한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사법개혁의 한 기둥이 사라지는 것뿐이다. 사법연수원의 기수 문화, 전관예우, 고시낭인의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수 배출은 통제되고 변호사의 지위는 다시 높아질 것이다. 변호사에게는 희소식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비보일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변호사가 되어 사적 이익을 누리는 사법연수생을 위해 1년에 370억 원이라는 세금을 써야 한다.<sup>4)</sup> 또 법조계는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법조계 자체가 이분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협회 역시 두 개로 나뉠 수 있다. 법조계의 분열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연고 주의도 여전할 것이다.

## 6. 발전적 대안은 무엇인가?

법조인의 선발은 법치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법조인 선발 방식은 매우 신중한 논의를 통해 그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

로스쿨 제도가 그 자체로 완전한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에 가해지는 비난은 실체가 없다. ‘사시 사랑’으로 대표되는 사법시험 출신 일부 변호사들과 그들

3) [blog.naver.com/homedoctorcs](http://blog.naver.com/homedoctorcs)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4) 2014년도 기준임. 일본은 사법연수원생이 사법연수원 연수비용을 납부하고 연수를 받고 있다.

의 지지를 얻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의 수장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낸 기사와 논란, 그리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재의 로스쿨 망국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인과 법조 발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어떠한 제도가 현재 적절한 제도인지, 어떠한 제도가 서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있는지, 어떠한 제도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인지 객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 동안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고시 제도에 꿈과 희망을 투영해 왔다. 그러나 고시 합격자들이 누린 특권은 한정된 소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합격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탈락과 좌절은 합격한 이들의 발판이 되어 합격한 이들의 신화 아래 가려져 있었다. 이러한 ‘희망 고문’적인 무한경쟁을 제도적으로 거부하고 완화시킨 결과가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법시험의 존치 주장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가, 결정적으로 우리 국가가 10년간 논의를 거쳐 개선하려고 한 ‘희망 고문’적인 무한경쟁을 다시 되살리려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나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붙을 수 있다”는 ‘구름사다리’가 될 것이다.

사법시험이 ‘기회의 균등’이라면,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은 ‘실질적 기회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이나 장학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정부와 법조계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이 시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기회 차이가 발생하는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등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몸도 마음도 가난한 학생이 혼자 신림동 고시촌에서 수강료와 고시원 월세를 걱정하며 사법시험 원서를 내기보다는 3년 동안 좋은 시설 및 풍부한 교수들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제도 및 변호사시험 운용을 감시해 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정의와 다양성이 충만한 변호사들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길 희망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